광주·전남 최대 상수원 주암댐 저수율 20% 붕괴

저수량 9천만톤 '간당간당'
산단 보수일정 단축 자구책
동복댐도 바닥…물부족 심화

광주·전남의 최대 광역상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 20%가 붕괴됐다. 가뭄 지속으로 저수량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주암댐의 저수량은 9,113만톤, 저수율 19.9%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저수율 30%가 붕괴된 지 2개월여만에 10%포인트가 더 줄었다. 저수량 역시 지난달 28일 1억톤이 무너진 데 이어 9,000만톤 붕괴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암댐은 광주시 3개 자치구를 비롯해 고흥·나주·목포·순천·영광 등 전남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철강업체가 들어서 있는 광양국가산업단지도 주암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주암댐은 도수터널로 연결된 주암조절지댐(상사호)의 저수율 감소세가 심각, 본댐의 방류량이 초당 20톤을 넘어서면서 저수율이 급감하고 있다. 주암댐은 물을 상사호 조절지댐으로 보내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계산을 가로지르는 길이 11.5㎞ 도수터널로 연결돼 있다.

반면, 주암댐의 전체 유역면적은 1,010㎢에 이를 정도로 넓지만 지속되는 가뭄으로 댐에 유입되는 수량은 이날 기준 초당 2톤에서 5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루 0.1%포인트씩 감소하던 주암댐 저수율은 방류량이 늘면서 하루 평균 0.5%포인트로 증가하면서 저수율 하락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주암댐은 본댐과 조절지댐에서 수돗물과 공업용수 등으로 하루 100만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다.

주암댐과 함께 광주지역 2개 자치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복댐의 저수율 역시 20%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전날 기준 동복댐 저수량은 1,905만톤, 저수율 20.72%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의 봄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보하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광주지역 수돗물 제한급수 예정일은 5월 초, 동복댐 고갈은 6월 초가 유력시되고 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산단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정비보수' 일정을 앞당겨 물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체육진흥협회 정기회의 광주 북구는 지난 3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지자체장, 체육회장, 학계 및 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진흥협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북구 제공

산단 업체들은 또 해수담수화 설비와 재이용수 확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여수·광양산단은 하루 평균 75만8,000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했지만 올해 1월에는 일평균 사용량이 70만7,000톤으로, 5만1,000톤이 줄었다. /정근산 기자

도, 사회적 배려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올 3월까지 동절기 적용
최대 14만8천원 할인

전남도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이다.

이번 요금 감면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에 한해 적용된다. 2022년 12월부터 사용분은 소급적용하고, 올 2월 16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됐다.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별로 감면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월 납입 도시가스요금 기준으로 최대 14만8,000원에서 최소 1만8,000을 할인받게 된다. 전남도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절차·방법 등을 몰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읍·면·동, 각 도시가스회사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5일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528억 확보

여수 진남관 등 259건 추진

전남도가 올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쓰일 국비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528억원을 확보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19건에 대해 국비 469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1월 52건 5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2022년 대비 169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보수정비 사업은 여수 진남관 해체보수 28억원, 장흥 천관사 선원 재현 24억원,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수 18억원, 고흥 순천교도소구 소록도지소 보수 18억원 등 259건에 739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숲 1억원,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1억원 등 42건 정비에 8억3,000만원을 들여 문화자원 보호에 나선다.

방충·방염 사업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 방염제 도포 8,000만원, 순천 낙안읍성 흰개미 방제 7,600만원 등 17건에 7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정근산 기자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본격화…

▶1면에서 계속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을 중심으로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뒷받침할 농협·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현재 농·수협중앙회 이전은 부산(수협)과 강원, 전북, 경북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광주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충북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아직 이전 대상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벌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의 물밑작업이 치열해지면서 과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구를 진행했던 김병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전이 나주로 이전하고 어느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지역 산업 연계성 부족, 성과 확산 미비 등 아쉬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 미흡한 사례를 분석하고 공동 기금 조성 운영 기구 설립 등 혁신도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 선별, 계획 수립, 의견 조율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하반기 이전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도의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만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또한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규모가 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상반기 정부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 그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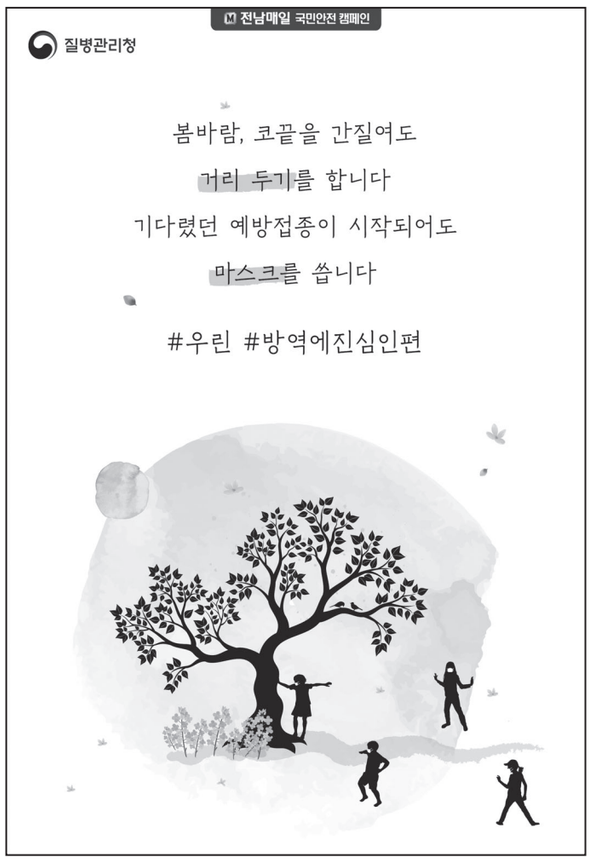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와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위해요인 집중점검

광주시는 5일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광주시·자치구·교육청·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156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등이다.

유해환경 정비 분야는 ▲학교 주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점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내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과 식중독 예방·점검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길용현 기자